

반도체·추경효과에 성장률 3%… 정부, 경기전망 ‘낙관 전환’

재경부, 산업·민생대책 공개
OECD·IMF 예측치 2.6% 웃돌아
취업자 15만명·물가 2.6% 제시
AI·바이오 육성·주택 공급 속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종전 대비 무려 1%포인트(p) 올린 3%로 제시했다. 반도체 호황기에 더해, 중동 사태에 맞선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 관측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일치된 예측치인 2.6%를 크게 웃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舊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예측인 2.0% 성장과 비교했을 때 ‘관망’에서 ‘낙관’으로 태세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경부는 “AI(인공지능)발 반도체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경 등 정책효과가 완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 13.(월) 오전 8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약’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또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경상성장률이 전년대비 12.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1996년(12.3%) 이후 30년 만의 최대 폭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이라 추산도 내놨다.

그러나 취업자 수 관련해서는 종전의 16만 명 증가에서 15만 명 증가로 소폭 내렸다. 소비자물가 부문도 2.1% 상승에서 2.6% 상승으로 올려 잡았다.

정부는 일자리 둔화 전망에 대해 “성장

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4~5월 실적 부진 및 건설업 회복 지연 등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탓에 일정 수준의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재경부의 강기룡 차관보는 “성장률 상승이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나오는데,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아 일자리 창출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용 감소와 생산연령인구 축소까지 감안해 취업자 전망을 1만 명 낮췄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생산설비가 자리한 지역과 대기업, 관련 인력은 성장세의 덕을 톡톡히 본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과 건설업, 자영업, 청년층 등이 체감하는 경기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딘 게 사실이다. 게다가 물가 오름폭이 크면 소비 위축이 뒤따른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을 7~11월 기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고며 ‘올해 민간소비의 2.0% 증가’를 목표로 제시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메모리반도체의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차세대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의존도가 99%에 가까운 국방반도체를 국산화하고,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을 올해 3분기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반도체법이 오는 12월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정부 주도의 수요를 적극 창출할 방침이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분야에서는 공공·민간 수요와 연계한 연구개발(R&D)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또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 글로벌 톱10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진입을 위한 청사진도 내놨다.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로드맵을 올해 4분기까지 마련하고, 건강검진 데이터 표준화·연계, AI 기반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발 주거안정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 중 3기 신도시 및 태릉·성남 등 주요 부지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여기에 재경부가 최종 조율 중인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개편안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6800호)과 인천 계양(1100호) 등 1만2000호는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태릉·성남 등 주요부지 착공 일정은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3분기 중 발표될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국민적 관심사다. 정부는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해, 국민의권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거래세·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물가 잡자니 경기 부담… 금리인상 ‘진퇴양난’

한은, 중동발 유가 급등에 섹법 복잡
기업·가계비용 늘어 경기둔화 우려

중동 리스크 재점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판단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유가 상승은 국내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기업 비용과 가계 실질소득 부담을 키워 경기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중동 긴장 고조 속에 배럴당 84달러대까지 올랐

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79달러대까지 뛰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운송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공급 불안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핵심 통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4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 흐름은 하루 평균 2000만 배럴로 전 세계 석유류 소비의 약 20%에 해당한다. 전 세계 LNG 거래의 약 20%도 이 해협을 지난다. 해당 지

역의 긴장이 커질수록 원유·가스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유가 상승, 물가엔 상방 압력

한국 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는 부담이 더 크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까지 겹칠 경우 원화 기준 원유 도입 비용은 더 커진다. 이는 석유류 가격과 수입물가, 기업 생산 비용을 거쳐 소비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번질 수 있다.

이미 국내 물가는 한은 목표를 웃돌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2% 올랐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5%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국제유가까지 다시 뛰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설명할 명분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최근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신 총재는 지난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엔 하방 압력, 추가 긴축은 부담
다만 유가 상승을 곧바로 추가 긴축 신호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에너지 가격 상승

은 물가를 밀어 올리는 동시에 기업 비용과 가계 부담을 키워 성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운송, 항공, 석유화학 등 에너지 비용 비중이 큰 업종은 원가 부담이 커지고, 가계는 연료비와 공공요금 부담이 늘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한은의 정책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물가만 보면 기준금리 인상 명분은 강해지지만, 유가 충격이 실물경제를 누르면 인상 이후 속도 조절 필요성도 함께 커진다.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유가 충격은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직접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은이 고려해야 할 변수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지역경제와 시민이 상생하는 공간,

모두가 행복한 All Good POEX

철강·해양 등 지역 기반 산업과 미래 산업을 아우르는 신성장동력의 거점!
포항 마이스(MICE)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컨벤션센터 조성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MICE산업
생태계 구축**

**시그니처
마이스행사 개발**

**국제행사
및 공연 유치**

**시민 친화형
문화휴식공간**